쌀·비료 대북 지원 '이면합의說' 왜?

통일장관 '말실수' 논란 자초

"쌀 40만t, 비료 30만t" 밝혔다 말 바꿔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놓고 남북 간에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져 그 전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혹은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회담 후 귀환해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공동보도문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쌀 40만t, 비료 30만t 지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가 "합의된 것은 없으며 쌀 40만t, 비료 30만t은 북한이 요청한 양"이라고 말을 바꾸면서 증폭됐다.

앞서 권호웅 장관급회담 북측 단장이 지난 2일 종결회의에서 "우리 민족끼리 마주 앉아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해 나간다면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이번 회담이 거둔 소중한 성과"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도 '이면합의'에 대한 의혹을 키웠다.

쌀 지원을 논의할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가 우리측 주장대로 '2·13 합의' 이행 시한 이후인 4월 중순으로 잡히는 등 공동보도문 만으로는 북측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만한 부분이 적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도 4일 현안 브리핑에서 "이 장관의 오락가락하는 발언은 이면 합의 의혹을 기정사실로 보기에 충분한 것"이라며 "이 장관은 성직자답게 고해성사하라"고 요구하는 등 '이면합의'에 대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일단 장관급회담에서 쌀·비료 지원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이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통상 연초에 열리는 장관급회담에서는 해마다 북한이 쌀·비료 지원을 요청해 와 의견 교환이 이뤄졌고 공감대가 이뤄졌다 해도 공동보도문에서 적시한 경우는 없었다.

실제 작년 4월 18차 회담 때도 이종석 당시 통일부 장관은 종료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측에) 비료 20만t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시에도 이 사안은 공동보도문에 포함되지 않았었지만 '이면합의' 논란은 없었다.

쌀 지원에 대해서도 대외적으로는 "경협위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넘어갔지만 장관급회담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는 게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다만 이 장관이 처음 언급한 대로 쌀 지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수준이 아닌 '합의'에 이르렀다면 문제는 다르다.

국회 보고 등 여론을 수렴하고 경협위를 통해 정식으로 계약하는 과정이 남아있는데 이를 생략한 것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통일부, 최성용씨 방북 허가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남북관계' 관련 신변보호자로서는 첫 방북

통일부는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부부의 금강산 관광을 위한 방북(3.5~3.7)을 허가했다고 4일 밝혔다.

최씨의 방북은 납북자 문제 등 남북관계와 관련해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인물로서는 첫 사례다.

통일부는 납북자 귀환을 돕는 활동을 벌여온 최씨의 방북 의사에 대해 신변 안전을 이유로 '불허 방침'을 통보하기도 했으나 납북자가족모임 대표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최씨의 방북을 최종 허가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최씨의 방북시 신변보호문제를 고려해 방북 불허를 검토하기도 했으나 개인적인 관광 목적의 방문으로 방북을 허가했다"면서 "최씨의 신변 안전은 다른 금강산 관광객과 마찬가지로 보장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씨는 2005년 6월 국군포로 장관선씨 일가족 6명을 집단 탈북시키는 등 적극적인 납북자와 납북자 가족의 탈북을 돕는 활동을 벌여 북한으로부터의 테러 위협 때문에 같은 해 10월부터 신변보호를 받기 시작해 현재까지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간이음식판매점 앞 줄선 북 주민들 남북장관급회담이 열렸던 지난 1, 2일 평양 창광거리 간이음식판매점 앞에서 주민들이 음식을 포장하기 위해 길게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8월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

통일硏 정세전망 보고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베이징 6자회담 타결 이후 남북관계 복원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8월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일연구원은 4일 '2·13 북핵합의 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이라는 정세분석 보고서에서 "남북 모두가 관계 발전을 통한 실리 추구를 위해 결정적인 관계 발전의 추동력 회복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참여정부 말기 및 남한의 대선국면에도 불구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와 북핵 해결과정에서 남북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고 북한은 안정적인 대북지원을 위해 상징적 계기가 필요하다"며 "장관급 회담, 특사교환, 정상회담 수순이 조심스럽게 전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기적으로는 올해 상반기 장관급 회담 등 당국회담 활성화, 6·15시점을 전후한 특사교환, 8·15시기 정상회담 가능성을 점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상회담이 어려울 경우 남북 총리회담이 예상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2·13합의 이행에 대해서는 "합의에 따라 북한이 30일 이내 영변과 태천 5개 핵시설 폐쇄 및 봉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작업 허용 등은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될 것"이라면서도 "60일 이후 핵시설 불능화 시행단계에서는 북미간 이견이 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방코델타아시아(BDA)문제 제재 해제 정도 ▲북미 정상화 진도 ▲한반도 비핵화 협상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며 북미간 이견이 심해질 경우 북한이 일정한 긴장 조성과 함께 '반미 모험행위'를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정세에 대해서는 "6자회담을 통해 대외관계가 개선됐지만 이를 통한 외부자본의 유입과 같은 경제발전의 동력이 북한경제에 전달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경제난 지속'을 예견했다.

북한은 이런 가운데 '민족공조론'을 부각시킴으로써 남한 내에 민족주의 정서를 확산시키고 대북지원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대규모의 상징적 민족공동행사를 제의해 6·15와 8·15 등을 계기로 남북한과 해외동포 등 3자 연대방식의 '이벤트'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점쳤다.

/연합뉴스

노대통령, 봉하마을 선영에 성묘

퇴임 후 머물 사저터도 둘러봐

노무현 대통령은 3일 부인 권양숙 여사와 함께 고향인 경남 김해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선영에 성묘한 뒤 이날 오후 귀경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노 대통령이 전날인 2일 진해 해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 행사에 참석한 뒤 해군공관에서 하룻밤 휴식을 취한 후 오늘 아침 권 여사와 함께 봉하마을을 찾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선영에 참배를 마친 뒤 마을회관에서 형 건평씨를 비롯한 마을 주민들과 담소를 나누며 오찬을 함께하고, 뒷산인 봉화산과 습지 화포천 일대를 둘러봤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현재 터파기 등 기초공사가 진행중인 퇴임 이후 머물 사저 터를 현장소장의 안내로 둘러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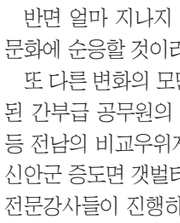
노 대통령이 봉하마을에 도착할 때 노사모 회원 50여명과 마을주민들이 마을 입구에 모여 노 대통령 내외를 환영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노 대통령이 휴가가 아닌 주말을 이용해 청와대가 아닌 외부에서 휴식을 취한 것은 작년 4월 이후 처음이며 임기 중 6번째다. 노 대통령은 휴식장소로 경남 진해와 거제 저도에 위치한 군 휴양시설을 주로 이용해 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현장과 시각

새봄, 전남도 새바람 불까



박치경

정치부 차장

최근 전남도청에서는 변화를 모색하려는 기류가 느껴진다. 우선 30년 가까이 금융계에서 근무했던 이상면 정무부지사가 취임 일성으로 기업 입맛에 맞는 투자유치 정책 추진을 강조한 것은 신선하게 받아들여진다. 또 도청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작된 자체 혁신교육이 업무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 지 관심이다.

이상면 정무부지사가 공직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환은행에서 해외투자를 전담했던 그는 주된 업무인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 조성(J프로젝트)의 투자유인책을 보고받고 "기업의 구미를 당길 방안은 어째서 하나도 없느냐"고 물었다. 지금까지 전남도가 기업의 투자욕구를 촉발시키기보다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치중해 그만큼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깔려 있었다.

부임 후 그의 언행을 전해들은 직원들의 반응은 두 갈래다. 먼저 "외부인의 시각에서 도정을 바라볼 수 있는 인사를 잘 골랐다"며 반기는 부류다. 투자유치 행정의 '소비자'인 기업의 입장에 있던 이 정무부지사가 업계의 생리를 겨냥해 '맞춤형 행정'으로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다.

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또한 '별탈없이' 조직문화에 순응할 것이라는 비아냥도 들린다.

또 다른 변화의 모멘트는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간부급 공무원의 혁신특별교육이다. 해양자원 등 전남의 비교우위자원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신안군 증도면 갯벌타운에서 조를 나눠 1박 2일씩 전문강사들이 진행하는 교육의 목적은 간부 공무원들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조직 목표 달성과 지역혁신을 위한 리더의 역할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교육에 박준영 지사도 특별강사로 나서 간부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여기에는 모두 8천 300만여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첫 교육에 참가했던 도청의 모 과장은 "전남이 외지인들에게 내놓을만한 자원을 직접 보고 문화관광사업의 밝은 미래를 점칠 수 있었다. 업무혁신을 위한 강의도 귀에 쏙쏙 들어왔다"며 높은 점수를 주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되풀이되는 단기 교육으로 무엇을 얼마나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예산이 아깝다"는 회의적인 시각이다.

외부인사 수혈로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간부들의 의식전환으로 혁신을 꾀하려는 노력이 열매 맺으려면 선결조건이 있다. 새 정무부지사가 신선한 감각으로 도정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본인 소신도 중요하지만 주변에서 '관행의 벽'으로 그를 고립시켜서는 안된다. 또 혁신을 위해 간부공무원들이 먼저 갖춰야 할 것은 열 마디의 다짐보다 변화에 대한 진지한 자세전환이다.

/unipark@kwangju.co.kr